

한미FTA가 부를 재앙

- 광우병 쇠고기 수입
- 의료비/교육비/공공요금 인상
- 비정규직 확대
- 빈부격차 심화

3월 25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와 농민 등 2만여 명이 모여 한미FTA 반대 시위를 벌였다.

지난 몇 달 동안 노무현 정부는 집회 불허와 경찰 폭력 등으로 한미FTA 반대 운동을 억눌러왔다. 그러나 이 날 집회 참가자들은 이런 시도를 좌절시켰고 해방감을 맛보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활력과 자신감에 차 보였다.

고무적이게도 민주노동당은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대중 행동을 건설하며 한미FTA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이 타결이나 결렬이나 하는 고비에 돌입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진행돼 온 한미FTA 협상에 불만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더욱이 광우병 의심 쇠고기가 들어오고, 향후 5년 동안 12조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한미FTA의 반민중적 본질이 속

속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 여론조사를 보면, 한미FTA 반대 의견이 47.5퍼센트로 찬성(40.5퍼센트)보다 더 높다. 또, 한미FTA로 자신의 경제 여건과 생활이 그대로이거나(48.3퍼센트) 더 나빠질 것(29.3퍼센트)이라는 응답이 더 좋아질 것(13.5퍼센트)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높다. 현 상태로 한미FTA를 타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무려 75퍼센트에 달한다.

이런 반대 여론 때문에 기성 정치권이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미FTA를 통해 도약하는 계기”를 강조한 천정배조차 단식에 돌입했고 김근태도 가세했다.

심지어 한나라당조차도 분명한 찬성 주장을 꺼리고 있다. 2002년 투쟁과 여론의 압력에 밀려 ‘여중생 범대위’ 농성장을 방문했던 이회창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런 상황이 한미FTA 반대 운동에 자신감을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3월 말 협상이 타결돼도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6월 말 체결과 그 뒤의 국회 비준을 바라보고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범국민 내에서도 협상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자신감이 더 높아졌다. 얼마 전까지 1천여 명의 단식 농성단을 꾸리려 했는데, 이제는 단식 농성보다 대국민 실천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또, 실천단 규모도 2천여 명으로 확대했다. 매우 바람직한 전술 변화다.

한미FTA 반대 여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바로 지난해 7월 12일 서울에서 5만여 명이 모였을 때였다. 그 뒤 정부는 집회와 행진을 한사코 막아 왔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광범한 반대 여론이 대중 행동으로 연결되고 서로 상승작용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청년들과 미조직 노

동자들을 이 운동에 대한 지지와 동참으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선전·폭로가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작업장과 학교와 거리에서 이 운동의 기반과 뿌리를 확대할 때다. 활동가들은 기층 대중을 파고들며 주장하고 조직해야 한다.

조직 노동자들도 앞장서야 한다. 다행히 25일 집회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한미FTA 투쟁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중 행동과 파업 건설 등에 나서야 한다. ‘산별노조와 정치 투쟁’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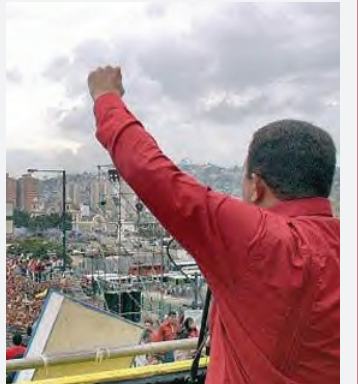
설사 노무현 정부가 3월 30일에 협상 타결을 발표한다 해도 그것이 거대한 분노와 투쟁을 촉발할지도 모른다. 또, 지금 건설하는 반대 운동은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그 뒤의 협정 체결과 국회 비준을 좌절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진보진영의 단결과
대선 후보 단일화

4면

차베스와
21세기 사회주의
- “선거 혁명”의 교훈

5면



제5차 카이로 국제반전 회의

7면

‘일심회’ 구속자를 석방하라

7면

‘3불 정책’과 교육 불평등

2면



〈맛볼〉온라인 기사

‘좌익 공산주의’ 강시

맑스주의 경제학자 정성진 교수가 스탈린주의 몰락 이후 일부 좌파 학생과 지식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좌익 공산주의’ 정치의 문제점을 고전 맑스주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비판한다.

구속된 전해두 강성철 동지가
보낸 편지

독자편지와 답변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국제 반전 회의에 〈맛볼〉 기자들이 다수 참가하는 관계로 〈맛볼〉 37호와 38호를 8면으로 발행합니다. 7면의 관련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인용해도 될까요?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군사력을 완전히 압도하기를 원했다. … 조기 정전을 거부했던 미국의 행동을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전쟁광 네오콘 존 볼턴

“충격을 주지 않으면 [농업] 구조조정이 안 된다. … 교만스럽게 말하지만 한미FTA는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 할 것 같아서 정치적으로 손해가 가는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은 노무현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FTA를 결정했다.”

－ 노무현

“구구절절 옳은 얘기 … 용기있는 행동 … 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 … 결국 노 대통령은 한미FTA를 성사시킨 용기있는 대통령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

－ <중앙일보>의 노비어천가

“한미FTA는 …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커다란 뜻에서 국익을 위해 노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

－ 전여옥

손학규: “지금의 한나라당은 군정의 잔당들과 개발독재 시대의 잔재들이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심재철: “그동안 한나라당에 있으면서 그런 줄 모르고 여태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순백의 상태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

“언론인 관리는 1차 식사 대접에 이어 2차, 3차 이상의 대접까지 직접 관할했다. … [성 접대는 이명박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이뤄졌다. … 당시 기자들이 현재 각 언론사 주요 포스트에 다 포진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이 전 시장에 대해 네거티브한 기사를 쓰지는 않을 것”

－ 김유찬의 폭로

“[이명박의 대선 공약인] 경부운하의 유일한 장점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인데, 일자리를 두 배로 늘리는 방법이 있다. 경부운하를 판 다음 다시 덮으면 된다”

－ 노회찬 의원

“한국 법원은 매우 인간적 … 한국에서 재판받고 싶다”

－ ‘유전무죄’를 부러워하는 전 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장 제프리 존스

“이라크 파병이 역사적으로 결코 비난받거나 잘못된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 제국주의 전쟁 지원 ‘확신범’ 노무현

‘3불정책’ 폐지는 교육의 양극화,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할 것이다

입시 경쟁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려는 우익들

조명훈

우익들이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동의 신호탄은 서울대가 쏘아 올렸다. 3월 21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위원장 장호완은 3불정책이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초”라고 비난했다. 다음 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3불정책 폐지”를 주장했고, 이명박과 박근혜도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맞장구쳤다.

이들은 OECD가 3불정책 폐지를 지지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OECD는 “3불정책과 다른 규제들을 서둘러 없애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익들이 3불정책을 폐지해 얻으려는 바는 명백하다. 교육의 양극화, 부의 대물림을 더 고착화하겠다는 것이다.

고교등급제는 그나마 유지돼 온 고교평준화를 해체해 끔찍한 입시 경쟁을 중학교·초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이다. 여기에 본고사까지 도입되면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여입학제는 형식적으

로라도 존재했던 ‘동등한 기회’라는 신화마저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데도 “‘3불’ 이후 사교육이 더 늘었”고, “평준화 아래선 가난한 집 아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며 짐짓 소외 계층을 위하는 척하는 <조선일보>의 위선은 정말 역겹기 짝이 없다.

위선

노무현 정부 하에서 사교육이 늘어난 것은 3불정책 때문이 아니다. 우익의 압력에 타협하고, 더 나아가 “대학은 산업”(노무현)이라며 교육 시장화 정책을 꾸준히 밀어붙여 온 데 진정한 원인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자립형사립고·국제학교·공영형혁신학교 등 ‘귀족학교’를 양산해 사실상 평준화를 근간부터 흔들었다.

또, 이른바 ‘일류 대학’들이 ‘통합형 논술’을 도입해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시키고 특목고 등을 대상으로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시행해 왔는데도 모르는 척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일쑤였다.

급기야 노무현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국공립대 축소·통폐합·법인화를 앞장서 추진해 대학간 ‘우수학생 유치’ 경쟁을 부추겼다.

무엇보다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 시장화 정책의 결정판이다. 한미FTA에서 고등교육은 이미 공공부문에서 제외된 지 오래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입시 경쟁이 더욱 극심해지고 교육은 더 노골적으로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다.

한미FTA

따라서 “학생을 획일적 입시 경쟁으로 내모는 … 정책을 할 수 없다”는 노무현의 말은 위선

일 뿐이다.

이른바 범여권의 대선후보라는 자들은 더 가관이다.

정운찬은 “교육부는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서울대 총장 시절부터 일관되게 ‘대학 자율’과 ‘3불 폐지’를 예찬해 왔다. 천정배도 기여입학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거들었다.

열우당은 “3불정책 유지”가 당론이라지만 정운찬에 대해 “교육 정책에 이견이 있어서 (통합신당을) 같이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3불정책 폐지를 고집할지, [3불정책을] 유지할지는 신당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노무현과 열우당(과 그 후신) 모두 대학 서열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파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들과 한나라당 같은 우익들 사이에는 교육 개방·시장화의 폭과 속도를 둘러싼 사소한 이견이 있을 뿐이다.

반면, 민주노동당 권영길·심상정 의원은 “서울대 독과점 폐지”, “대학평준화” 등 진정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안은 교육 시장화, 대학 서열화 정책에 고통받아 온 대중의 투쟁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평준화가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킨다?

<조선일보> 등 우익들은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낳고 … 교육의 다양성·창의성을 해친다”며 고교평준화 해체를 주장한다.

그러나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낳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OECD 회원국들의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는 한국 학생들의 종합적인 학업 성취도를 핀란드에 이은 2위로 평가했다. 1위를 차지한 핀란드

는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을 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평준화 정책을 펴는 나라다. 반면, 명문 사립고가 많고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순위가 한참 뒤쳐졌다.

비평준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을 비교 평가한 국내 연구 결과를 봐도 상위권 학생들은 큰 편차가 없는 반면, 하

위권 학생들은 평준화 지역보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성적이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중등교육에 평준화가 도입되기 전의 중·고등학교 풍경을 떠올려 보면 평준화 해체의 결과가 얼마나 재앙적일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평준화가 해체되면 학력의 상향 평준화는커녕 경기고-서울대 식의 ‘귀족’들만 양산되고, 끔찍한 입시 경쟁이 중학교까지 확대될 것이다.

무엇보다 “하향 평준화” 운운하는 우익들의 주장은 시험 점수 하나로 학생들을 재단해 줄 세우는 것과 교육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진정으로 “교육의 다양성·창의성을 해치는” 것은 이처럼 ‘학력’을 잣대로 한 줄세우기식 입시 교육 자체다.

한미FTA 반대와 저항의 세계화

‘한미FTA 묻지마 타결’을 강행하는 노무현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는 바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다. 이명박은 “[노무현이]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경제 논리로 말을 하는 것 같더라. 긍정적으로 본다”고 칭찬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여옥도 한미FTA 협상이 “노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 노 대통령을 도와” 주자고 했다. <중앙일보>는 “한미FTA를 성사시킨 용기 있는 대통령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이라며 노무현을 찬양했다.

노무현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한미FTA 협상 과정은 저들의 ‘국익’ 논리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 ‘도대체 한미FTA로 얻는 실익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찬성론자들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

‘실익’으로 거론해 온 무역구제·자동차·섬유류 분야에서 한국 협상단은 무엇 하나 제대로 관철하지 못했고, 의약품·농산품·쇠고기 등에서는 ‘퍼주기’ 협상으로 일관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내법을 1백60여 개나 개정해야 하고 ‘투자자 정부 제소’나 ‘비위반 제소’ 등에 따라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와 개입이 크게 약화할 거라는 우려도 많다.

그럼에도 한미FTA를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국가의 이익을 더 많이 관철해야 한다는 논리와 쌀 시장 개방 저지나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등에서 미국의 일부 양보를 얻어내면 한미FTA를 지지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협상단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에 반박하기 힘들어진다. 나아가 미국 시장을 개방하라는 신자유주의적 요구에 동참하게 될 수도 있다.

사실,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국익’은 허구다. ‘국익’은 사회 구성원 공동의 이익일 수 없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등)을 추구하는 한미FTA가 기업주들에게는 ‘실익’을 주겠지만 평범한 대중에게는 공공서비스 저하, 양극화 등의 ‘손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평범한 대중 사이에는 한미FTA 반대 여론이 우세하지만, <매일경제>의 설문 조사에서 정·관·재계 인사들의 한미FTA 찬성은 92.1퍼센트였다.

누구의 이익인가

노무현과 조중동은 3년 전 체결된 한·칠레FTA를 성공 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한·칠레FTA로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규모가 늘어났고, 우려하던 농업 피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박웅두 정책위원장은 한·칠레FTA 이후 “1만여 농가가 폐업했고, 관련 농산물의 국내 판매 감소액이 4백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출이 늘긴 했지만 거의 전적으로 대기업들에만 집중돼 있다.

<동아일보>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들어오고 생필품 가격이 내려가 저소득층에 이롭고 …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이런 거짓말을 반박하는 가장 생생한 사례는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FTA를 맺은 멕시코다. 1994년 나프타(NAFTA) 출범 이후 2003년까지 멕시코는 무역 규모가 2.5배 증가했고 수출도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멕시코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하루 5달러에서 4달러로 하락했으며, 전체 노동자의 25퍼센트에 달하는 1천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20퍼센트 감소했다. 실업률도 9.7퍼센트에서 15.1퍼센트로 증가해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했다.

최근에는 미국 옥수수 가격이 크게 올라 멕시코인들의 주식인 옥수수빵(토르

피아) 가격이 40퍼센트나 오르자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자동으로 고용 증대를 유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해 투자했다가 자본 철수를 할 경우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한다. 1천3백 명을 거리로 쫓아낸 오리온전기가 본보기다.

한미FTA가 값싸고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소비자 이익의 관점에서 득이 된다는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FTA 체결이 부를 교육·의료·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시장화는 의료비·약제비 비용 증가와 전기와 수도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낳을 것이다.

의료 시장화는 미국처럼 부자들을 위한 사보험과 형편없는 공공 건강보험으로 의료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다. 수업료와 등록금도 폭등할 것이다. 이미 인천 송도에는 등록금이 2천만 원이 넘는 국제학교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의료·교육 등을 돈벌이로 삼는 자들에게는 이익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고 고달프게 만들 것이다.

저항의 세계화

노무현과 조중동은 ‘개방과 FTA는 대세’라고 말한다. 그러나 FTA 체결은 세계적 대세가 아니다. 미국이 추진하던 미주자유무역협정(FTAA)도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진 반대 시위 때문에 좌절됐다. 또, 최근 미국은 말레이시아·베트남과 FTA 협상을 진행했지만 모두 결렬됐다.

노무현은 최근 “충격을 주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안 된다”며 다시 한 번 FTA 추진의 핵심 이유를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도 최근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잘못하면 으깨질지도 모

를 위기에 처했다. … 이때 한미FTA라는 역사적 기회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최근 조선업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자 이런 위기의식은 더 커졌다.

세계 시장의 경쟁이 격화함에 따라 한국 지배자들은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어한다. 지배자들은 한미FTA가 이런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외부 충격’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협상에서 ‘손해’를 보고, 반대 여론에 시달리면서도 죽자 사자 매달리는 것이다.

그러나, FTA로 가속화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증가, 공공서비스 악화와 요금 인상, 사회 양극화 확대 등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대중의 삶을 파괴하며 끔찍한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상장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구가하는 동안에도 평범한 대중의 삶은 더 나빠지고 양극화는 심해졌듯이 말이다.

오늘날 세계의 진정한 ‘대세’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파탄시키고,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라틴아메리카의 반란이 그것을 보여 준다.

베네수엘라·볼리비아·에콰도르에서 신자유주의 추진 세력은 반란에 직면했고 좌파 정권이 등장해 석유·가스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제국주의와 반신자유주의의 상징으로 떠오른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를 외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유럽헌법이 대중들에게 거부됐고, 프랑스에서는 비정규직 확대 법안인 최최고용계약법(CPE)이 노동자 총파업으로 철회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수가 통제하며 이윤을 위해 공공성과 노동권과 환경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아니라 이러한 저항의 세계화다.

이정구·전지윤

진보진영의 단결과 대선후보 단일화

진취적 도전으로 기회를 움켜쥐자

전지윤

대선을 앞두고 주류 정치권의 불안정과 분열이 지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손학규가 탈당했고 지지율 1위의 대선 주자 이명박의 범인 도피, 살해 협박에 이어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졌다. 한미FTA 등을 둘러싼 노무현·열우당의 분열도 심각하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열우당과 그 변종들뿐 아니라 “군정과 개발독재의 잔재들”(손학규)인 한나라당도 혐오한다. 최근 한길리서치 여론 조사에서 20대 젊은이의 무려 35퍼센트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취적 도전보다 기존 틀만을 고집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어떻게 하든 선거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 ‘민주노동당 외에 의미있는 진보 세력은 없다’,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일 뿐이다’ 등의 주장은 좁은 시야와 소극성의 반영일 뿐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의 단결과 대선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미 〈진보정치〉의 당원 설문조사 결과에서 ‘범진보진영이 단결해야 한다’는 답이 66.7퍼센트였다.

지난 3월 7일 ‘다함께’ 주최 토론회에서 ‘개방형경선제’를 주장한 김창현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민중경선제’를 주장한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당원직선제’를 주장한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모두 진보진영 선거연합에 동의했다.

선거연합

정종권 위원장은 최근 〈레디앙〉 기고글에서도 “진보진영의 힘을 극대화[하기] … 위해서 필요한 과제”라며 선거연합을 적극 옹호했다.

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권영길 의원도 최근 〈진보정치〉 인터뷰에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도 최근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광범한 진보 대연합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겨레21〉은 “권·노·심 세 후보 모두 진보진영 대연합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치적 양극화에서 비롯한 기회를 잘 이용하려면 광범한 세력이 연합해야 한다. 이미 노무현·열우당·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친제국주의 동맹에 맞서는 운동의 연합이 있다.

진보적 NGO, 민주노동당, 급진좌파, 노동·민중단체들이 함께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파병반대국민행동’ 등이 그것이다. 이런 연합은 선거연합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선거연합은 노무현·열우당의 배신에 분노해 대안을 찾고 있는 기층 대중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러려면 이 같은 대중이 지지하는 진보적 NGO들과 임

종인 의원 같은 개인들을 선거연합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연합의 대상은 사회당, 노동자의 힘과 같은 비(非)민주노동당 좌파 정치세력들, 초록정치연대와 일부 시민단체, 미래구상과 그 유사 조직”이라는 정종권 위원장의 주장은 타당하다.

반면, “기존 정치 세력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노회찬 의원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 “[신자유주의 반대와 6·15선언 지지] 두 가지를 동의하면 과거에 무엇을 했든 … 흔쾌히 손잡을 수 있다”는 정성희 전 민주노동당 기관위원장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지금중 미래구상 사무총장도 “자유주의 개혁 세력도 들어오겠다고 하면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반한나라당 전선’이나 ‘비판적 지지’라는 오해를 자초하면서 진보진영의 단결에 해를 끼칠 뿐이다. 한나라당·열우당과 그 변종 등 기존 정치 세력들은 모두 이라크 파병, 노동법 개악, 한미FTA 등을 추진해 온 장본인들이다.

김근태·천정배 등도 마찬가지다. 열우당에서 “주인 노릇” 하던 자들이 뒤늦게 한미FTA의 문제점을 발견한 척하는 것은 역겹고 미덥지도 않다. 이런 불순물이 끼어들면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취지는 왜곡될 것이고, 개혁과 진보를 염원하는 대중의 기꺼운 지지를 끌어낼 수 없다.

따라서 진보의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진보의 기준은 첫째, 신자유주의 반대여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측면은 받아들이지”는 천정배와, 한미FTA가 “긍정적”이라며 “[다만] 체결은 다음 정부로 넘기자”는 김근태는 걸려져야 한다.

더구나 김근태와 천정배는 열우당 의장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정규직·정리해고를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을 지지해 왔다. 열우당 386 ‘개혁파’들도 마찬가지다. 신

자유주의 핵심 정책을 지지해 놓고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둘째, 전쟁 반대와 한반도 평화여야 한다. 한나라당 일부도 말하는 ‘햇볕정책 지지’ 정도는 안 된다. 미국의 대북 압박에 반대해야 하고, 무엇보다 한국군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레바논 파병에 반대해야 한다. 노회찬 의원도 ‘이라크 파병 반대’를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불순물

따라서 2004년 이라크 파병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근태·천정배는 포함될 수 없다. “개인적으로 반대”라면서도 꼭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우며 이라크 파병안 통과를 간접 지원하더니 ‘유엔평화유지군’이라며 레바논 파병을 찬성한 열우당 ‘개혁파’들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곳곳을 끔찍한 전쟁터로 만든 부시의 전쟁을 지지하면서 ‘반전 평화’를 말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비핵 평화’ 구호처럼 역겨운 위선이다.

위의 두 가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기성 정치인은 임종인 의원뿐이다. 따라서 셋째, 한나라당과 열우당과 그 변종 등 주류 정치 세력의 일부여서는 안 된다. 이들은 기득권 세력을 기반으로 삼고 전쟁·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 온 당사자들이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진보적 NGO와 민주노동당, 노동·민중단체와 일부 개인 등 진정한 진보진영이 광범하게 연합해야 한다.

권영길 의원이 말했듯이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의 대표이자 국회에 진출한 유일한 진보 세력으로 … 진보 대연합 추진”에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먼저 개방적인 자세로 진보진영 연석회의나 원탁회의를 제안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들도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권한을 위임받은 각 단체의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후보 선정의 기준과 방법,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그에 따라 각 단체별로 한 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다. 이미 민주노동당에도 3명의 유력한 후보가 있다.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 후보가 진보진영의 다른 후보들과 경쟁해서 당을 뛰어넘는 진보진영의 후보가 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 단체들이 먼저 각각의 후보를 선출하고 나서야 다음 단계로 대선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다.

신자유주의 유럽헌법 반대 투쟁과 최초 고용계약법(CFE) 철회 투쟁에서 단결했던 프랑스 진보진영이 대선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교훈을 돌아봐야 한다. 공산당과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이 각각 자체 후보를 먼저 결정해 버리자 단일화가 힘들어진 게 사실이다. 결국 프랑스 진보진영은 4명의 후보로 대선을 치르고 있다.

각 단체가 자체의 후보 선출에 시간과 자원을 투여하며 우선 열중하다 보면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 추진을 소홀히 하게 되고 미뤄지기 십상이다. 더구나 이미 선출된 각 단체의 후보들을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사퇴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1998년 선거에서 ‘애국의 기둥’이라는 선거연합을 통해 집권한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물론 차베스라는 강력한 후보가 있어서 비교적 쉬웠지만 사회주의운동당(MAS), 급진행동당(LCR), 공산당 등은 대선 6개월 전에 후보 단일화를 합의했고 결국 승리했다.

지금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급진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방적인 자세로 단결하고 대중에게 다가가는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거 혁명”은 진정한 혁명으로 발전해야 한다

김인식

베네수엘라는 국제적으로 피억압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반개혁’이 절대 질서처럼 돼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볼리바르 식 혁명’이 대안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베네수엘라의 실험이 주목받는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참조 사례가 되는 듯하다.

“베네수엘라 식 선거연합을 벤치마킹”해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결성하자는 주장도 있다(2월 21일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가 주최한 ‘민주진보진영의 2007년 대선 전략’ 토론회). 이번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선거 돌파구를 내기 위해 적극 고려해 볼직하다.

1998년 말 주지사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베네수엘라 진보진영은 선거연합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사회주의운동당’(MAS)과 ‘만민을 위한 조국’(PPT)은 분열까지 했다. 선거 공동대응이 자신의 급진적 강령을 낮추고 조직의 독자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 차베스에 대한 정치적 의심도 상당히 컸다.

그러나 마침내 ‘제5공화국운동’, MAS, PPT, 공산당 등이 참가한 ‘애국의 기둥’이 결성됐다. 절박한 단결 요구 때문에 ‘애국의 기둥’ 참가 단체들은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소속 정당에 대한 충성심을 접고 지역구마다 단일 후보를 내기로 합의했다. 12월 대선에서는 차베스를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내세웠다.

그 결과, 1958년 이래 베네수엘라를 독점해 지배해 온 민주행동당-기독교사회당 양당 체제가 무너졌다.

“무장 혁명의 시대”는 지났는가

선거를 통해 집권한 차베스 정권의 개혁 실험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의 “선거 혁명”에 주목한다.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선거를 통한 혁명적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차베스의 실험은 생생하게 증언해 준다”고 말했다. “무장 혁명의 시대는 지났”고 “선거 혁명이 옳은 노선”이라는 것이다.

물론 베네수엘라에서는 진정한 개혁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개혁들은 게릴라 투쟁이라는 뜻에서 “무장 혁명”에 의해 획득된 것은 아니다. 무장 게릴라라는 소수에 의한 ‘혁명’은 고전 맑스주의의 아래로부터의 혁명 개념과 관계가 없다.

그러나 개혁은 소수(대략 25퍼센트)에 계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 혁명”이 고전적인 의미의 혁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은 여전히 건재하다. 베네비전과 글로보비전 같은 미

디어 제국들의 건재가 이를 증명한다. 기존 국가 기구들이 대부분 고스란히 남아 있다. 국가 기구는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혁에 브레이크를 건다. 베네수엘라 “혁명” 과정의 모순이자 “선거를 통한 혁명적 전환”이 산통을 겪는 까닭이다.

세 번에 걸친 차베스 제거 기도가 연거푸 실패했고 지난해 말 대선에서도 차베스에게 참패했기 때문에 부르주아 야당들은 당분간 찌그러져 있을 듯하다. 그럼에도 베네수엘라 부르주아 계급 자체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 각종 개혁 조치들이 석유 수입(收入)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들의 부(富)도 고스란히 보전될 뿐 아니라 심지어 더 증대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도시빈민·농민이 부르주아지한테서 양보를 얻어내려면 여전히 투쟁해야 한다. 대중운동이 강력하게 전진한다면, 혼란에 빠져 있는 국가 기구와 재앙적인 오판 때문에 주요 정치적 전투들에서 패배한 부르주아지한테서 중요한 양보를 따낼 수 있다.

그러나 혁명은 자본주의적 기존 국가 기구에 의지해 완수될 수 없다. 국가 기구는 기껏해야 건성으로 개혁을 실행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개혁에 저항할 것이다.

일부 좌파 장관들은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에 양보하곤 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탄압이 있었다. 예컨대, 2005년 11월 다국적기업들에 맞서 투쟁하고 있던 금광 광부들 중 14명이 무장경단에게 살해당했다. 광부들은 대형 차베스 사진을 들고 행진했다. 그러자 군대 — 이들도 차베스 지지자들일 것이다 — 가 광부들을 공격했다.

20세기 노동자 운동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개혁과 혁명에 관한 논쟁이 베네

수엘라 대중 운동 안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이런 모순 때문이다.

‘볼리바르 식 혁명’의 두 구성 요소

“선거 혁명”을 강조하는 것은 ‘볼리바르 식 혁명’을 이루는 상이한 두 구성 요소 중 한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계몽된 상층 개혁가들이 대중에 개혁을 하사한다는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급진화와 ‘볼리바르 식 혁명’에는 상이한 두 구성 요소가 존재한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노동자·도시빈민·농민·원주민의 대중 운동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 자본주의 발전 같은 포퓰리스트 정책을 지지하는 지식인과 중간계급(일부 장교들을 포함해)이 초점이다. 이들은 미국 제국주의에 도전한다. 그와 동시에, 대중운동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긴다.

두 구성 요소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 중간계급 정치인이나 장교들이 주도하는 반제국주의적 도전은 대중 저항을 고무했다. 차베스 전복 기도에 맞서 대중이 즉각 방어 운동에 나선 것이 그 예다.

그럼에도 사태전개의 논리는 두 구성 요소를 상이한 방향으로 몰고간다. 국민 경제 발전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제국주의와 토착 부르주아지의 단절을 바란다. 또, 개발에 필요한 잉여 축적의 문제와 대면한다. 이들에게 대중의 경제적 요구는 제국주의의 압력만큼이나 큰 장애물이 된다.

한때 정부 차관을 지냈던 롤랑 데니스는 이렇게 말했다. “차베스는 사회주의를 우리가 건설해야 할 사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회의 적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위로부터 개혁의 성과는 아래로부터 혁명을 통해 공고해져야 한다

않는다. 그가 말하는 적은 언제나 제국주의이지, 보통 국민 부르주아지를 공격하지 않는다.”

이것은 “혁명” 과정을 방해하는 정책이다. 자본주의의 이해관계를 위해 고안된 기존 국가 기구를 통해 자본주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기껏해야 불완전한 ‘혼합경제’를 만들 것이다. 그리 되면 부자들은 더 부유해질 것이고, 노동자와 빈민은 세계 유가가 하락할 때까지 각종 사회 개혁 프로그램에 의지해 연명하게 될 것이다.

물론 차베스의 개혁은 대중 의식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대중 스스로 자주적인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차 옛 국가와 자본의 영향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대항 권력을 건설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선거 혁명”이 과거 제3세계 급진적 민족주의 정권들의 실패나 칠레 아옌데 정권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중이 단지 민족주의 지도자들의 팬클럽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 제국주의는 지난 6년 동안 자신의 뿔마당인 라틴아메리카에서 벌어진 투쟁의 파고에 갇짜 놀랐다. 이라크 수렁으로 말미암아 힘이 약해진 탓에 한동안 군사적 개입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사태를 수수방관하며 자신의 영향력이 계속 약해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반동 세력을 다시 조직할 것이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라틴아메리카에서 대중 반란의 물결이 일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베네수엘라의 “선거 혁명”과 혁명 담론은 진정한 혁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잡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권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자본가들이 ‘아베 망언’에 반대할까?

지난 <맞불> 36호에 실린 김송 동지의 ‘아베 망언’ 기사는 현재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아시아 민중 간 국제 연대 필요성과 일본 좌파의 과제가 무엇인 지도 분명하게 제시했다.

다만, 독자들에게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김송 동지의 한두 가지 주장에 대해 내 나름의 이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현상적으로 일부 일본 자본가들이 아시아 시장을 중시해 때때로 우익들의 돌출 언행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예컨대, 2005년 일부 자본가들은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참배에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일본 자본가들의 태도는 양면적이다.

일본 우익들의 망언이 일본 자본가들의 단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망언들은 핵심적으로 일본 군국주의화라는 일본 자본주의의 장기 전략과 맞닿아 있다.

또, 일본 자본가들은 우익 정치인들과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주요 후원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우익

역사교과서 채택을 주도한 ‘새역모’의 주요 후원자 명단에는 미쓰비시 중공업 회장, 후지쓰 명예회장, 전 아사히 맥주 회장 등 재계 거목들이 망라돼 있다.

키미지마 리츠메리칸 대학 교수는 “일본의 경단련도 다국적기업화해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경단련·일본상공회의소·경제동우회 등 일본 주류 자본가들은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 해외 파병을 지지하는 등 일본 군국주의화의 일관된 지지자들이었다.

경단련

김송 동지가 인용한 경단련 보고서 “희망의 나라 일본”에서도 ‘아시아에서의 경제 협력’을 말하는 동시에, “교육기본법의 이념에 입각해 … 애국심과 국기·국가를 소중히 생각하는 정신을 길러야” 하고 평화헌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지역사회포럼

서울 동부

중국 — 경제 기적은 끝나는가?

4월 10일(화) 오후 7시 30분

연사: 김용욱(주간 <맞불> 기자)

장소: 동부여성플라자 2층 세미나실 (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8-330-4624

서울 남부

카이로회의 참가자가 말하는

중동의 반제국주의 저항과 국제 연대

4월 11일(수) 오후 8시

연사: 김광일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원)

장소: 전교조 서울지부

(아수역 7호선 7번 출구)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6495-9925

부산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있는가?

4월 12일(금) 오후 8시

연사: 이정규(경상대학교 경제학 강사)

장소: 토즈(서면 마리포사 4층)

참가비: 2천 원

문의: 018-552-7696

대학맑스주의포럼

한미FTA

—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인가

건국대

4월 11일(수) 오후 6시 30분

문의: 010-6636-5349

서울시립대

4월 11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건설공학관 206호

문의: 011-9980-9222

일본 지배계급 전체에게 ‘경제 협력 강화’와 ‘군국주의화’는 모순이 아니다. 최근 일본은 아시아 EPA(경제협력협정)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의 협조를 받아 오스트레일리아와 군사협약을 맺기도 했다.

따라서 아베 망언이 기본적으로 일본 자본가들의 경제적 이익과 배치된다고 생각하면 마치 일본 자본가들이 군국주의화를 반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한편, 보통의 일본 국민들이 아베 망언에 적극 호응할지도 단정할 수 없다. 아베의 잇따른 망언에도 그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다는 사실이나, 우익의 침병 노릇을 하는 동경도지사 이시하라에 반대하는 정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범하게 퍼지고 있다는 점을 봐도 그렇다.

만약 아베가 망언으로 지지율을 높이려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보수·우익층을 결속시키는 선거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할 듯하다.

한규한

충남대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 신자유주의와 대학 교육

4월 3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충남대 인문대 강의실

문의: 011-9097-0420

고려대

신자유주의를 넘어

—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민중의 저항

4월 5일(목) 오후 6시 30분

연사: 김인식(주간 <맞불> 발행인)

문의: 011-9952-6288

한국외대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 신자유주의와 대학교육

4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인문과학관 409호

문의: 010-4670-1392

<맞불> 증면을 위한 5천만 원 모금에 동참합시다

*02) 2271-2395으로 메시지나 전화를 주십시오.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17002-04-078931

농협 100037-56-119794

우리은행 1002-130-549338

하나은행 197-910005-87207

기업은행 066-042771-01-012

신한은행 308-12-498840

우체국 011726-02-129945

*홈페이지 www.counterfire.or.kr에서 CMS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MS 모금은 매월 25일에 인출됩니다.

*홈페이지 www.counterfire.or.kr에서 핸드폰 결제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표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제5차 카이로회의의 참가

반전 ·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국제적 단결과 전진을 위해



2005년 제3차 카이로회의 —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활동가들이 반제국주의 투쟁의 최전선 중동에서 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논의한다

제1차 카이로회의는 미국이 이라크 침략을 준비하던 2002년에 열렸다. 당시 카이로회의의 구호는 “세계화, 미국의 세계제패 전략, 전쟁에 반대한다”였다. 유엔의 이라크 경제 제재 반대와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연대 활동을 한 이집트 활동가들뿐 아니라 다른 국제 활동가들이 앞장서 이 행사를 조직했다. 그래서 아랍 · 유럽 · 아메리카에서 온 다양한 활동가들이 참가할 수 있었다.

그 뒤 카이로회의는 세 차례 더 열렸고 팔레스타인과 이라크의 저항세력들도 참가하면서 규모가 더 커졌다. 지난해 열린 4차 회의에는 무려 2천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에는 팔레스타인 · 이라크 · 레바논 · 베네수엘라 · 한국 · 터키 · 그리스 · 나이지리아 · 영국 · 캐나다 · 튀니지 · 수단 · 프랑스 · 이란 등 15개국 단체들이 참가를 결정해 역대 최대가 될 듯하다. 한국의 민주노동당도 이 회의에 참가하고 ‘다함께’도 80여 명이 참가한다.

한국에서 반전 ·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건설하는 데 헌신해 온 많은 활동가들이 세계 반전 ·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다.

지난 카이로회의가 보여 준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보더라도 이는 명백하다.

먼저, 2002년 제1차 카이로회의는 ‘카이로 성명’에서 반제국주의 운동과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결합 필요성을 제

기했다. 이는 세계 수준은 물론 한국에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과제다.

특히 올해는 이란 공격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 반전 운동이 이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한국 참가자들은 국제 정세의 핵심 고려인 이 논의 과정에 개입하고 그 결과가 한국의 반전 운동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 고리 노릇을 해야 한다.

무슬림형제단

카이로회의는 국제 반전 · 반신자유주의 운동 세력과 중동에서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헤즈볼라 · 하마스 · 무슬림형제단 등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슬람 파시즘’이라는 단어가 재등장하고, 유럽에서 히잡과 니깅 착용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고, 이집트 정부의 무슬림형제단 탄압이 자행되는 등 최근 전 세계에서 무슬림 혐오가 심해진 탓에 이런 교류의 기회는 훨씬 더 중요해졌다.

또, 카이로회의는 토론만 하고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 단순한 ‘포럼’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결함시키려 노력했다. 그래서 2003년 2 · 15 국제 반전 행동을 비롯한 국제 반전 · 반신자유주의 동원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고,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등의 반제국주의 운동에 행동으로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호소했다.

카이로 회의에 참가할 80여 명의 대규모 한국 참가자들은 한국의 반전 ·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국제적 반전 ·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과제들을 공동으로 수행할 중요한 일부임을 보여 줄 것이다.

한편, 현재 이집트 국내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바라크 정부는 헌법을 개악해 장기 독재의 기반을 다지려 한다.

종교에 기반한 정당의 창설과 선거 참가를 금지하고, 테러 방지 조항을 삽입하려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슬림형제단이 선거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고, 테러 방지 조항 덕분에 무바라크 정부는 의회에서 계엄령에 대한 동의를 주기적으로 얻을 필요가 없어져 ‘반영구적’으로 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영 기업 사유화를 촉진하는 문구를 넣어 신자유주의 ‘개혁’도 더한층 강화하려 한다.

반면, 최근 주목을 받은 노동자 파업 물결도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알렉산드리아 방직공장 노동자 5천 명이 사유화 반대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 참가자들은 국제 반전 ·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일부로서 이런 이집트 노동자들의 저항을 지지하고 무바라크 정부의 탄압과 독재에 항의할 것이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전통이 있는 한국 참가단은 무바라크 독재에 맞서고 있는 이집트 활동가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고, 특히 엄혹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집트의 사회주의자들을 고무하게 될 것이다.

김용욱

‘일심회’ 재판

“피고인들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지난 26일 검찰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징역 15년 i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주노동당 관련 정보가 “국가 기밀”이라고 우기며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정보’들은 민주노동당 활동가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일뿐더러 상당수는 대중적으로 공개된 내용들이다. 그래서 변호인들은 검찰 식의 자의적 규정이라면 “국가기밀 아닌 것을 찾는 게 더 힘들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내부 정보 ‘유출’이 언제부터 “국가 존립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公安 검사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운동의 정보를 일상적으로 엿탐 · 유출해 온 공안 검찰 자신과 보안경찰이야말로 “중대 범죄자”다.

검사는 ‘일심회’ 사건이 사실상 사상 재판을 실효했다. 검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부정하는 자유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며 탄압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체제 비판적 사상을 인정하지 않는 공안 검사 자신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부정”한 셈이다.

심지어, 이정훈 동지는 검찰의 수사에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는 이유로 ‘주범’ 장민호 씨와 같은 15년 형을 구형 받았다.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다.

검사가 ‘일심회’ 탄압이 “대북 경각심이 희박해지는 상황” 때문임을 밝힌 것도 사건의 본질이 마녀사냥임을 보여 준다. 검찰은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켜 전체 이데올로기 지형을 오른쪽으로 이끌려 했던 것이다.

또, ‘일심회’ 사건 재판에는 명백히 이중 잣대가 적용됐다. 지난 25일 노무현은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운동의 활동가가 “친북하면” 탄압받지만 지배자들의 “친북”은 그렇지 않다.

이해찬이 방북하고 안희정이 베이징에서 북한 관리를 ‘비공식’적으로 만난 건 남북 교류지만 ‘일심회’ 관련자들의 대북 접촉은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 활동”이 된다.

이정훈 동지는 최후진술에서 “자본주의가 만든 과도한 경쟁과 환경 파괴를 넘어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꿈을 꾸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을 꿈꿀 기회마저 빼앗는다.”

구속 동지들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탄압이 “사회적 · 인격적 살인”이며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이 주장했듯이 “국가보안법 자체가 위헌적인 법”이며 “피고인들은 무죄”다.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한규한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맞서는 국제 연대를 향하여”

Fifth Cairo Conference

제5차 카이로회의

2007. 3. 29~4.1

Fifth Cairo Conference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희생자 49재

강제추방 중단 ·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폐쇄
행동의 날

4월 1일(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

주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대위

공무원 퇴출제를 중단하라

정종남

서울시청 등 지자체에서 시작된 ‘공무원 퇴출제’가 중앙 정부까지 확대되고 있다. 행정 자치부 장관 박명재가 공무원 퇴출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 하겠다고 공무원 퇴출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고위 관료들의 부패·무능·관료주의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공무원 노동자 공격에 이용하며 전체 노동자들과 공무원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

정부는 정작 퇴출해야 할 고위 관료들의 비리는 눈감아 왔다. 론스타 ‘떡튀’ 사건의 주역인 재경부 고위 관료들이나 성추행 연루 공직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았다.

반면,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은 비리를 저지를 만한 재량권도, 자신의 일에 대한 통제권도 없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주요 대상이 되는 공무원 퇴출제는 오히려 ‘줄 세우기’를 강화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워 관료주의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서울시청은 해마다 퇴출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시 구조조정은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결국 공

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퇴출자 명단에 소방직 1백57명이 포함돼 있지만, 소방직 공무원들은 인원이 부족해 24시간 맞교대로 무려 주 84시간을 일하는 등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행정기관 업무의 아웃소싱이나 민간 위탁을 시도하고 있다. 당연히 비정규직이 늘어날 것이고 사유화한 부문은 수익성을 이유로 요금을 올릴 것이다.

퇴출제는 다른 부문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미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책 금융기관이 퇴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공기업 전반으로 퍼질 듯하다. 이는 ‘대기업 노동자 귀족론’처럼 다소 처지가 나은 노동자들을 고립시켜 공격하고 다시 전체 노동자의 처우를 끌어내리는 수법으로 일반 기업들도 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 퇴출제는 노동자 전체를 향한 공격의 방아쇠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대정부 투쟁을 조직할 뿐 아니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이 공무원 퇴출제 저지 투쟁에 적극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 전체로 공격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이렇게 싸우면 막을 수 있다

마포구청 공무원들은 지난 2월 공무원 퇴출제 시행 계획이 알려지자마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 즉각 투쟁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출퇴근 시간에 퇴출제에 반대하는 리플릿을 배포했다. 점심 시간에는 조합원들이 참가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저항이 커지자 마포구청장은 노동자들의 기세에 밀려, 단 한 명의 공무원도 퇴출하지 못한 채 구조조정 계획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구로구청 공무원들도 값진 승리를 거두었다. 구로구청은 공무원 퇴출제의 한 형태인 ‘삼진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공무원노조 구로지부의 활동가 이재열 동지는 지부 지도부가 투쟁에 소극적인 상황에서도 퇴출제 반대 리플릿을 만들어 구청의 구조조정 계획을 폭로하고, 단결해서 싸우자고 선동했다.

이 동지는 지부 전체 공무원들을 일일이 만나 투쟁을 선동하고, 연대하러 온 다른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순회 선동을 하기도 했다. 이 동지가 주도한 구청 현관 앞 촛불 집회에는 멀게는 대구·경북 지역 활동가들을 비롯한 부천·과천 등 다른 지역 동지들도 참가했고, 이 같은 연대 투쟁에 힘입어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결국 조합원들의 지지가 모이고 대중적 압력이 형성되자 구청장은 당분간 ‘삼진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물러섰다.

이처럼 단호하게 싸운다면 퇴출제를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은 정당하다

최근 최순영 의원이 발표한 <<2007년 대학등록금 인상 현황 중간 분석>>을 보면, 사립대 의학 계열의 등록금이 이제 1천만 원을 넘어섰다. 공학·예체능 계열도 각각 9백20만 원, 9백80만 원으로 1천만 원 문턱에 섰다.

이런 “살인”적 등록금 인상 때문에 결국 두 자녀 대학 등록금을 고민하던 4대 주부가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딸 등록금을 내지 못한 4대 가장이 분신하는 일도 있었다.

3월 들어 대학가에서는 이런 무지막지한 등록금 인상에 맞선 저항이 확대되고 있다.

한양대에서는 입학식 항의 행동의 성공에 이어 학생 총회가 성사됐다. 학생 1만 6천 명 중 1천8백 명이 총회에 참가했고, 한양대 당국은 학생들의 압력에 밀려 요구한 검토와 총장 면담을 약속했다. 한양대 학생들은 2차 학생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금오공대에서도 전체 학생의 4분의 1이 넘는 학생들이 참석해 학생 총회가 성사됐다. 전북대에서는, 30퍼센트 인상안에 맞서 학생들이 대학본부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끝에 재학생 인상률을 9.7퍼센트로 낮췄다.

한국해양대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전체 학생 6천여 명 중 1천6백 명이 납부 거부에 나섰다. 서울대에서는 등록금 인상분 반환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시작된 지 열흘도 안 돼 1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대학에서 3월 30일 집회와 학생 총회 건설을 위한 3보1배 시위와 서명 운동, 홍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투쟁의 열기는 오는 3월 30일 대학생 2차 공동행동에서 더 크고 단단하게 뭉쳐야 한다. 이 날,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대학 당국들과 교육부에 함께 항의할 것이다.

벌써부터 경찰은 이런 대학생들의 움직임을 탄압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경찰은 3월 30일 집회를 불허했을 뿐 아니라 교육대책위 활동가들에게 “집회를 강행하면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협박했다.

하이킥

이번 집회 금지 조처는 한미FTA 반대 시위나 3월 17일 반전 시위에서 드러난 것처럼, 노무현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의 일환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 운동이 그래왔듯이, 대학생들도 경찰 탄압에 굴하지 말고 더 굳건하게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3월 30일, 우리는 교육의 권리뿐 아니라 집회와 시위의 자유 같은 민주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

나아가 3월 30일 시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내에서도 대학 당국을 겨냥한 더

큰 대중 행동을 섬 없이 건설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연간 예산을 1조 2천억 원이나 부풀려 5조 3천억 원의 이월적립금을 쌓아 놓은 사립대학 당국들이 “정부의 교육 재정 지원 부족”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해마다 기성회비를 최대 18.5퍼센트 올려야 한다”는 서울대 등 국·공립대학 당국들도 법인화 바람 속에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지 오래다.

OECD 최저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0.4퍼센트)을 방관하는 무책임한 교육부뿐 아니라 이런 파렴치한 대학 당국들에게도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려줘야 한다.

서범진

등록금 인상 반대!
등록금 규제정책 법제화!
교육재정 GDP 6% 확보!

300

전국대학생 교육공동행동
3월 30일 서울도심
주최 :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